

2022- 05호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국토교통기술 Brief

2022년 02월 | 2022-05호

발행일 2022. 02. 25. 발행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기술 Brief 2022-05호 목차

연 번	주요 내용	구분	페이지
1	• (日) 「연비 기준 달성 건설 기계의 인증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토교통성, 2.10)	건축	1
2	• (韓)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행정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 1.27)	건축	2
3	• (美) 2022년 도시를 변모시킬 주요 트렌드 (AMPO, 1.26)	도시	3
4	• (中) 저가 주택 품질에 관한 문제 예방 및 통제 강화 고시 (주택 도시 농촌 진흥청, 2.22)	주거	4
5	• (韓) 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소법」 안전관리분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2.3)	플랜트	5
6	• (美)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담당 기관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실시 (미국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국, 12.29)	교통/도로	6
7	• (美)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위한 미에너지부·교통부의 공동의 노력 실시 (미 에너지부, 2.10)	교통/도로	7
8	• (韓) 보행자 생활권 안심도로 조성 추진 (한국교통안전공단, 2.10)	교통/도로	8
9	• (EU) 유럽 가상 교통 관리 네트워크 개발 제안 (CER, 2.9)	철도	9
10	• (英) 항공기 지연 배상을 위한 대체적 분쟁방안 (ADR) 절차 마련 (영국민간항공관리국 1.31)	항공	10

01 | (日) 「연비 기준 달성 건설 기계의 인증에 관한 규정」의 개정 (국토교통성, 2.10)

■ 유압 굴삭기, 불도저, 휠 로더의 차기 연비 기준치를 정하고, 「연비 기준 달성 건설 기계의 인증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개정

- ◎ 국토교통성은 2013년에 「연비 기준 달성 건설 기계의 인증에 관한 규정」을 정해 연비 기준치를 달성한 건설 기계의 인증 제도를 운용해 왔으며, 이번에는 유압 굴삭기, 불도저, 휠 로더의 차기 연비 기준치를 정하고, 규정을 개정
- ◎ 연비 기준 달성 건설 기계의 인증 제도
 - 목적 : 건설 기계에서 배출되는 CO2 감소
 - 대상 : 오프로드법 배출가스 2014년 기준 등에 적합한 기계(기준을 달성하는 유압 셔블, 휠 로더, 불도저, 휠 크레인)
 - 연비성능이 뛰어난 건설 기계를 인증하고 연비 기준을 달성한 건설 기계의 보급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건설 기계 메이커 및 건설업자에 의한 자발적인 활동의 실시를 촉진
- ◎ 인증 제도의 대상으로 하는 건설 기계 종류
 - CO2 배출 기여율이 높은 이하 4기종(건기 전체의 약 75%)을 연비 기준의 대상
 - 휠 크레인에 대해서는 2022년 4월부터 인증을 개시할 예정
 - 유압셔블(0.085m³ 이상1.7m³ 미만), 불도저(19kW 이상300kW 미만),
 - 휠로더(40kW 이상230kW 미만), 휠크레인(최대 매달림 하중 4.9ton 이상 150ton 미만)
- ◎ 연비 기준을 달성한 건설 기계의 인증을 실시해, 연비 기준의 달성 상황에 따라 ‘☆’ 설정
 - 2030년 연비 기준 달성률 100% 이상 : ☆☆☆☆
 - 2020년 연비 기준 달성률 100% 이상 : ☆☆☆
 - 2020년 연비 기준 달성률 85% 이상 : ☆☆

[그림] 연비 기준 달성 상황에 따른 등급



요약/시사점

▷ 국토교통성은 유압 굴삭기, 불도저, 휠 로더의 차기 연비 기준치를 정하고, 「연비 기준 달성 건설 기계의 인증에 관한 규정」에 대해 개정함

※ 출처 : 국토교통성, 「燃費基準達成建設機械の認定に関する規程」の改正について, 2022.02.10

URL: https://www.mlit.go.jp/report/press/sogo15_hh_000308.html

02 | (韓)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행정절차 간소화 (국토교통부, 1.27)

■ 국토교통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해 제로에너지건축물(ZEB)인증 대상의 인허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

-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녹색건축 확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설계단계부터 에너지 저감기술을 적용하여 원천적인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기준으로 연간 건축허가 연면적 중 약 80%가 해당 기준을 적용
- ◎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취득 시 행정절차 간소화
 - 기존 건축허가 시에는 ZEB 인증 건축물도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나, 향후 ZEB 인증 건축물은 그 에너지성능을 인정하여 행정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
 - 따라서, ZEB 예비인증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경우 EPI 및 에너지소요량 평가서와 더불어 검토서까지 제출해야 했던 중복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ZEB 인증 시 혜택을 부여
- ◎ 건축물 열 손실방지 조치 합리화
 - 구조 특성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외벽 등 구조 안전성을 상시 감시할 필요가 있어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원자로 관계시설'에 대하여 열 손실방지(단열 등) 조치를 개선
 - 바닥 단열 시 식물 성장의 방해가 되어 건축용도 상 목적을 상실하는 '온실·작물재배사'와 화재 관련 성능 유지를 위해 단열기준을 만족할 수 없는 일부 건축자재('소방관진입창' 및 '방화문')에 대하여 단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
- ◎ EPI* 평가항목 등 정비
 - * 에너지성능지표로 검토서 상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부문별 권장(선택) 사항 중 건축주 등이 희망하는 지표를 선택하여 최저점 수 이상 취득 필요(공공 74점, 민간 65점)
 - 건축물의 용도·특성별로 그 실효성이 상이하고 제품(기기) 자체의 대기전력 차단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모든 건축물에 의무 적용되는 전기부문 에너지 절감 기술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그림] 통·폐합되는 EPI 평가항목



요약/시사점

- ▷ 건물부문 탄소중립 촉진하기 위해 ZEB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실효성이 상이한 평가항목으로 개정

※ 출처 : 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물 행정절차 간소화로 편의성 높인다. 2021.0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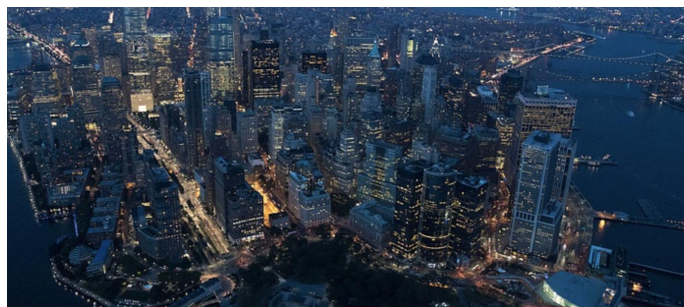
URL :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tage=3&id=95086488

03 | (美) 2022년 도시를 변모시킬 주요 트렌드 (AMPO, 1.26)

■ 2022년 미국 도시가 나아갈 방향 설정을 위해 도시가 직면한 최신 트렌드 분석

- ◎ 미 대도시권 계획기구(APMO)는 주요 미국 거대도시들이 직면한 트렌드를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도시 문제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
- ◎ 범죄와 치안은 지역 지도자들의 최우선 과제
 - CNN에 따르면 미국 40개 도시 중 2/3가 '21년에 전년도 대비 더 높은 살인이 발생하여 '공공안전'은 2022년 최우선순위 현안으로 지정되어 다수의 지도자들은 경찰인력이 수행하는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경찰 분야 예산 증설을 요청하고, 다양한 치안 개혁을 이행 중
- ◎ 교통기관은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케 하기 위한 노력 실시
 - 코로나로 인해 높아진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서비스 감소는 저소득층 및 유색 인종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뉴욕, LA, 보스턴 등 대도시들은 버스 네트워크를 개편하여 대중교통 의존율이 높은 사람들을 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예정(10억 달러 연방 재량자금 투자)
- ◎ 마이크로모빌리티(친환경 동력을 이용하는 소형이동수단)는 도시교통의 핵심수단이 될 것
 - 코로나로 인해 시내가 폐쇄되고 일부 업체가 차량을 철수시키는 등 지역사회가 셧다운되어 한동안 모빌리티 산업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기반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마이크로모빌리티 이용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
 - 다수 도시가 안전을 개선하고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며 도로 혼잡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험하기 위해 임시 허가 및 시범 프로그램을 사용중
- ◎ 이 외에도 기후적응 현안의 급박한 필요성에 따라 자연 본연의 해결책 제시 등이 존재
 - ※ 길가 나무심기를 통한 탄소격리(carbon sequester), 수자원 재활용, 유출수 감소를 위한 빗물정원 및 그린루프 설치 등 기존 도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목표(기후문제 심각성을 인지하여 작년 통과된 인프라법안으로 기후 유동성 분야에 470억 달러 예산 배정)

[그림] 미국 대도시의 모습



요약/시사점

- ▷ 코로나 발생 기점으로 크게 변화된 도시가 직면한 주요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범죄와 치안 문제, 불안정한 주거 문제 등 전형적인 도시 문제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마이크로모빌리티, 기후적응 등 새로운 도시 문제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각 분야에 적합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함

※ 출처 : 미국 대도시권계획기구(APMO), 8 Trends Shaping Cities in 2022, 2022.01.26

URL: <https://ampo.org/8-trends-shaping-cities-in-2022/>

04 | (中) 저가 주택 품질에 관한 문제 예방 및 통제 강화 고시 (주택 도시 농촌 진흥청, 2.22)

■ 주택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위해 중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가 주택건설 추진에 관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을 위한 품질 강화를 고시

- ◎ 프로젝트 품질의 감독 및 검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식적 기술 기준을 선정
 - 각 지방의 실태와 미해결 문제를 종합하며 공동의 문제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기본 요건을 명확히 구성

〈표〉 주택 구조개혁을 위한 기술 기준

구분	주요 상세 기준
실외 물과 마주하는 표면 방수	· 난간 지붕 내부 배수 구배 5% 이상 · 배수 구조 배수 경사 5% 이상 · 지하수면 주요구조 방수콘크리트, 두께 250mm 이상
실내 누수 방지	· 욕실 바닥과 벽 방수층 시공 높이 2m 이상으로 샤워기보다 높아야하며, 다른 벽 방수층은 다른 벽 방수층은 0.3m 이상 · 케이싱의 상단은 장식 바닥에서 20mm, 욕실 및 주방 바닥 케이싱의 상단은 50mm이상 높아야함
실내 방음 및 소음 방지	· 승강로 및 기계실은 침실에 인접하지 않아야함 · 침실로 전달되는 외부 소음은 낮 40db, 밤 30db 이하여야하며, 바닥 슬래브 두께는 100mm 이상이고 표준 충격 음압 레벨은 65db 이하여야 함
깨끗한 실내 공기	· 인증 마크가 있는 녹색 건축 자재를 사용해야함 · 실내 공기 오염 물질 농도 포름알데히드 0.07mg/m³ 이하, TVOC는 0.45mg/m³ 이하, 변기 트랩의 수밀 깊이와 바닥 배수 구조는 50mm 이상
건물 내부 균열 방지	· 평탄도 2m 이내 편차 3mm 이하 · 바닥 타일 표면층과 벽의 접합부는 스커트 또는 벽 압착 방식을 채택
고정된 가구 효율적 설치	· 수납장 등은 벽이나 지면 가까이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이 뒤틀림 없이 평평해야 함 · 캐비닛, 조리대, 레인지 후드, 위생도기, 램프 등은 벽, 윗면 및 지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함
장비 및 파이프라인 효율적 설치	· 전기 장비는 충분한 강성과 강도를 가져야함 · 생활용수 공급의 장비 및 파이프는 위생 및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
낙하 방지	· 벽 단열 보드와 기초 층 사이 및 각 구조 층 사이의 연결은 표준 요구사항을 충족 하며 견고해야 함

◎ 상기 기준 이행의 책임과 감독 및 관리를 강화

요약/시사점

▷ 최근 주택 수요 문제로 정부에서 저가 주택을 보급하였는데 부실한 건설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식적인 주택 건설의 최소 기준을 고시함

※ 출처 : 住房和城乡建设部办公厅(주택도시농촌개발부 총무처), 住房和城乡建设部办公厅关于加强保障性住房质量常见问题的通知, 2022.02.08

URL : https://www.mohurd.gov.cn/gongkai/fdzdgknr/zfhcxjsbwj/202202/20220222_764573.html

05 | (韓) 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소법」 안전관리분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2.3)

■ 세계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2.5일부터 시행

- ◎ '19년 강릉 과학단지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소법」을 제정·도입

* 수전해설비 R&D 실증 중 산소제거기 등 안전장치 미설치로 인해 수소탱크가 폭발한 사고(인명피해 : 사망 2명, 부상 6명/ 재산피해 : 340억 원 추정)

- ◎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

* 수소 소비량이 232.6kW 이하인 고정형 연료전지

- ◎ 수소법 안전분야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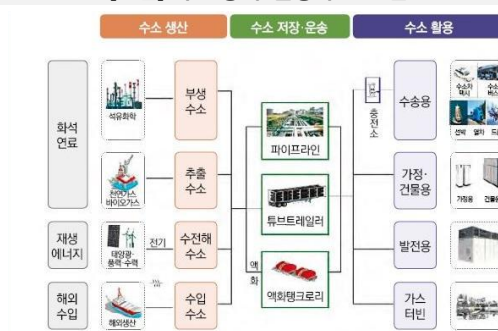
- 수소용품(수소추출설비 등 수소제조설비 및 연료전지)과 수소용품 제조자에 적용
-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현지 공장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 (법률 제38조, 시행령 제46조)
- 수소용품 제조자와 수입자는 수소용품을 판매·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필요 (법률 제44조, 시행령 제57조 제4항)

* (검사대상 수소용품) 수소법 시행일(22.2.5) 이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수소용품부터 검사 실시

- 만약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법률 제59조 제1항) 검사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률 제59조 제2항 4호)

- ◎ 이를 통해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 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그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요약/시사점

-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용품을 판매 사용하기 전에 한전의 검사가 필요하며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 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소법」을 2.5일부터 실시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소법」 안전분야 시행, 2022.0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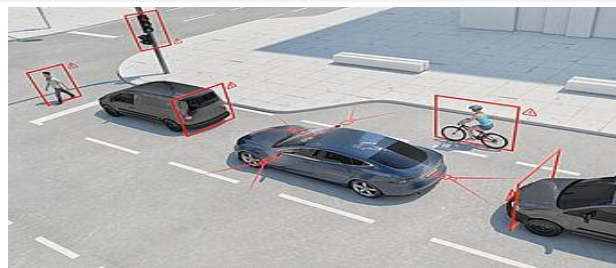
URL :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65251&bbs_cd_n=81¤tPage=61&search_key_n=title_v&cate_n=&dept_v=&search_val_v=

06 | (美)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담당 기관에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 실시 (미국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국, 12.29)

■ 미국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은 자율자동차 사고 발생 보고를 의무화하는 절차를 통해 안정성 강화 및 빠른 상용화를 위한 기반 마련

- ◎ 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업체나 운영자는 자율주행 단계별 규정절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이를 보고하도록 지시
 - 사고 보고를 의무화하여 주요 데이터 접근권을 확보하여, 자동화 시스템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문제를 신속히 발견 가능
 - 실제로 관련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은 국민이 연방정부가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을 자세히 살피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신뢰감을 향상
- ◎ 자율주행 단계별 세부적 사고 보고 절차
 - 2단계 ADAS 자동차 혹은 3단계 자율주행 자동차가 입원치료를 요구하는 부상, 사망, 고속도로에서의 강제견인, 에어백 작동, 보행자 혹은 사이클리스트의 사고 등에 연루 시, 사고 발생 하루 안으로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는 이를 의무적으로 당국에 보고하며, 사고 인지 시점 열흘 내로 상세 보고서를 제출
 - 자동차회사는 모든 부상 혹은 재산 손실을 포함하는 ADS 자동차 관련, 모든 사고 보고 의무가 있으며 새로운 혹은 추가정보를 포함하여 매달 보고서를 업데이트
 - 교통안전국은 제출된 보고서에서 포함된 특정 사고에만 한정하지 않고 발생 가능한 모든 사고와 안전결함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ADS 데이터를 취합하여(운전자가 필요없는) 자율주행 자동차사고에서 발견되는 공통패턴이나 시스템적 문제 파악
 - 더 나아가, 개별사고에 관한 추가조사가 필요할 시, 해당 건을 ‘특별사고조사전담팀’에 회부하고, 해당 회사는 의무적으로 추가정보를 제출
 - 만약 교통안전국이 제시한 리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안전문제 결함이 발견될 시에는 소비자들이 이를 안전국 홈페이지나 자동차 안전문제 신고를 위한 전용 핫라인에 직접 보고

[그림] 자율주행 보행자 인식 시스템



요약/시사점

- ▷ 자율주행자동차가 점차 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성 관련 논란이 많아 안정성 강화를 위한 사고 보고의 체계적 절차 마련은 필수이며, 이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출처 :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 Incident Reporting for Automated Driving System (ADS) and Level 2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2021.12.29.

URL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1/09/30/2021-21203/agency-information-collection-activities-notice-and-request-for-comment-incident-reporting-for>

07 | (美) 전기차 충전소 구축을 위한 미에너지부·교통부의 공동의 노력 실시 (미 에너지부, 2.10)

■ 미국 에너지부는 미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 배치 위해 50억 달러를 지원

- ◎ 미국 전역에 약 50억 달러를 투자하는 ‘새로운 국가 전기차 인프라 포물러 프로그램’ 발표
 - NEVI(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프로그램에 의거해 구축될 전기차 충전소는 편리하고, 신뢰 가능하며, 저렴한 가격의 공정한 국가 EV 충전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 예정

* 각 주가 전략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 수집, 접근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상호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재정 보조금을 지원

- ‘21년 11월 통과된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투자법(BIL)에 의거한 프로그램이며 모든 미국인의 EV접근권 향상을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
- 약 5년 동안 투자되며 각 주가 지정된 대체연료회랑(Alternative Fuel Corridor)에 따라 EV 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을 지원하게 되며, 특히 주간 고속도로에 설치될 계획

◎ EV 구축 프로그램 특징 및 세부사항

- 2022년의 투자금액은 약 6억1천5백만 달러로, 각 주는 연방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 ‘EV 인프라 배치 계획안’을 반드시 작성 및 제출해야하며, 이는 ‘대체연료회랑’에 기반하여 작성될 계획안으로, 회랑은 새로운 국가적 EV 충전소 프로그램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
- 연방고속도로국이 프로그램 보조금을 운영, 관리하며 각 주별 인프라 배치계획안 가이드라인 작성하고 계획 안의 최종승인여부를 결정
- BIL는 미교통부 장관이 각 주별‘EV 인프라 배치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며, 이에 따라 EV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각 주는 지정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예산 상세계획안을 작성할 것
- 미국 에너지·교통 공동부는 DriveElectric.gov 사이트를 새로 구축하여, 기술지원, 데이터, 톨 등의 검색기능

[그림] 미국 내 전기차 충전소 구축 사례



요약/시사점

- ▷ 미국은 친환경 전기차 보급률 증가 목표 자체가 아닌,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으로 미국 전역, 특히 주간 고속도로(interstate highway)중심의 EV 충전소 네트워크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중

※ 출처 : 미에너지부(DOE), President Biden, DOE and DOT Announces \$ 5 billion Over Five Years for National EV Charging Network, 2022.02.10

URL : <https://www.energy.gov/articles/president-biden-doe-and-dot-announce-5-billion-over-five-years-national-ev-charging>

08 | (韓) 보행자 생활권 안심도로 조성 추진 (한국교통안전공단,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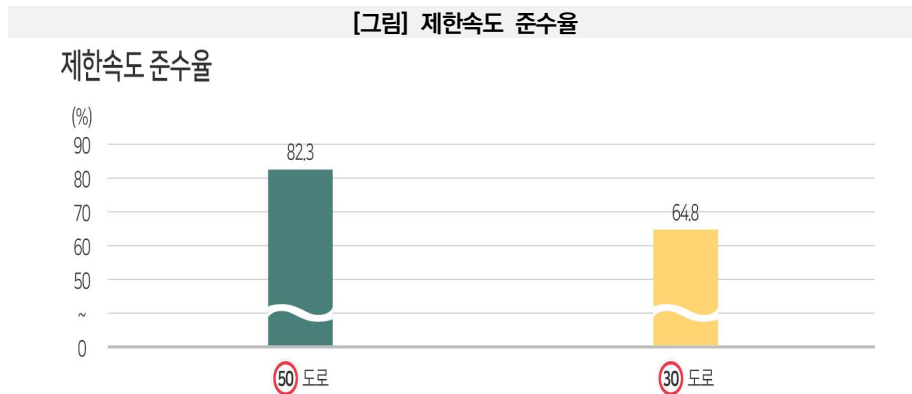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한속도 준수율이 낮은 도로를 대상으로 생활권 도로의 안심도로*를 위한 집중관리를 추진

* 국민의 직접통행이 이루어지는 생활권 도로 중 다양한 이동수단 간(보행자, 자동차, 이륜차, PM 등) 안전성과 공존성이 확보된 도로

- ◎ 안전속도로의 유도를 위한 속도운영 전략 마련, 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시설 개선, 보행자를 우선 보호하는 교통문화 조성을 추진할 계획
- ◎ 4월 도시부 속도 하향 정책 시행 이후 조사한 제한속도 준수율*('21년 12월 기준)

* 도로구간을 통과한 전체 사업용 차량 중 제한속도를 준수한 차량의 비율

- 도로별 제한속도 준수율은 시속 50km 도로에서는 평균 82.3%의 높은 준수율을 보인 반면 시속 30km 도로의 준수율은 평균 64.8%로 시속 50km 도로보다 17.5% 낮은 수치



- 이는 시속 30km 도로에서 제한속도 준수율이 낮은 이유로 운전자가 낮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도로시설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으로 판단
- 준수율이 낮아 차량이 각기 다른 속도로 주행하는 도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행자 통행이 잦은 생활권 도로(시속 30km 도로)는 정온화시설 설치 등을 통해 준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
-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한속도 준수율이 낮은(40% 이하) 시속 30km 도로를 대상으로 안전 속도 유도를 위한 집중관리를 추진할 계획
- 집중관리구간으로 선정된 도로에 대해서는 시민점검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맞춤형 개선안을 발굴, 지자체에 건의
- 제한속도 준수율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준수를 제고 성과가 더딘 집중관리구간에 대해서는 보행자 보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도 전개

요약/시사점

-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완성 등 20년간 장기 추진계획 및 코로나19 이후 정상화를 위한 5년간 교통시설 투자계획과 기타 개정안을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추진중

※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보행자 생활권 안심도로 조성 추진, 2022.02.10

URL : https://www.kotsa.or.kr/portal/bbs/report_view.do?bbsecCode=report&cateCode=&bbsecSeqn=17884&pageNum=1&sechCdtN=&sechKywd=&menuCode=05010200

09 | (EU) 유럽 가상 교통 관리 네트워크 개발 제안 (CER, 2.9)

■ 유럽의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전략은 여객과 화물을 포함한 국제 철도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여 유럽 수준에서 효율적인 교통 관리에 대한 더 많은 요구를 초래

- ◎ 범유럽 수준에서 효율적인 교통 관리를 위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인프라 관계자들이 가상 유럽 교통 관리 네트워크(디지털 솔루션으로 지원)를 개발하여 국가교통통제센터(NTCC)와의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
 - 가상 교통 관리 네트워크를 생성하기 위해 유럽 철도 인프라 관리자(EIM)와 함께 절차 마련 필요
 - 공통 교통 관리를 위한 지침 개발 및 채택 필요
 - 강력한 협력을 통해 교통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모드 전환 및 그린 딜 목표 달성에 기여

〈표〉 협의 추진 내용

구분	주요 내용
1	- 디지털 정보 교환을 포함한 구두 및 디지털 통신 절차 개선
2	- 국제 교통 관리에서 공통적으로 조화된 NTCC 교통 관리 절차 및 통신 구현
3	- NTCC 간에 통신을 위해 사용할 공통 언어 또는 디지털 도구 구현을 점진적으로 구현 - 이러한 디지털 도구는 안전 문제가 완전히 완화될 정도로 기술이 개발될 경우, 열차 승무원과 교통관제 센터 간의 의사소통에도 잠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공통 언어 또는 디지털 도구는 모든 행위자가 같은 언어를 구사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용
4	- 인프라 관리자(IM)의 트래픽 관리 도구에 표시되거나, TAF/TAP* 의무 데이터 교환을 통해 얻은 정보 외에 정보 교환 및 통신 목적을 위한 국경 간 트래픽 관리의 기본 옵션으로 RNE TIS(Train Information System)를 사용 * Telematics Applications for Freight/Passenger Services 화물/여객 서비스를 위한 원격 정보 처리 애플리케이션
5	- RNE TIS 및 절차를 추가로 조정하여 터미널, 항구 및 화물 운송업체와의 데이터 교환을 확장하고 고객에게 관련 데이터를 제공
6	- 열차 운행 과정에서 국경을 넘는 조직 활동 및 관련된 역할과 책임을 식별하고(안전 절차와 관련이 없음) 교통 관리에 대한 완전한 국제적 접근을 위해 노력
7	- 터미널, 항구와 같은 이해관계자 및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효율적인 가상 ETM*에 기여하는 RFC**의 역할을 지원 * ETM : European Traffic Management, 유럽 교통 관리 ** RFC : Request for Comments, 인터넷 개발에 필요한 비평문서
8	- ICM(International Contingency Management) 핸드북을 미래의 가상 유럽 교통 관리 개념에 통합
9	- 디지털 용량 관리(DCM, Digital Capacity Management)를 포함한 TTR(스마트 용량 관리)와 ETM 간의 시너지를 유지

요약/시사점

▷ 교통 관리가 여객 및 화물 서비스 모두에 대한 국제 철도 운송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는 영역이며 모든 행위자 간의 더 강력한 협력으로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음을 제안

※ 출처 : 유럽철도및기반시설기업커뮤니티(CER), Striving for a virtual European Traffic Management, 2022.02.09

URL : <https://www.cer.be/publications/latest-publications/striving-virtual-european-traffic-management>

10 | (英) 항공기 지연 배상을 위한 대체적 분쟁방안 (ADR) 절차 마련 (영국민간항공관리국 1.31)

■ 영국민간항공관리국은 항공기 지연 시 새로운 대체적 분쟁 방안(ADR)을 발표

- ◎ 영국 국토교통부 산하 민간항공관리국(Civil Aviation Authority)은 EU 회원국 당시 제정된 규칙 개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항공기 지연 배상절차 및 그 외 현안 관련 논의
 - 영국 국내선 비행지연 시, 신속하고 공정한 배상을 위한 새로운 배상 모델(fairer competition model)을 고려 중이며, 기존의 '3시간 이상 지연' 대신, '비행연착시간 및 여행경비' 기준으로 승객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
 - 영국 정부는 항공사와 승객 간 비행지연에 따른 분쟁 발생 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ADR 제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든 항공사가 의무적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 중
- ◎ ADR 도입 의의
 - 모든 항공사는 새로운 ADR 제도를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할 것으로, 승객들은 어떠한 항공사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분쟁 해결이 가능
 - 승객들이 일정 자격에 부합하면, 이에 따른 신속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당국은 관련 절차를 지원 할 것
 - 승객 및 항공사 양측 이익 모두를 더 강력히 보호할 수 있는 영국 규제 당국 권한을 강화하며 동시에 영국 민간항공관리국(Civil Aviation Authority)은 승객들의 공정한 '보호 및 대우'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
- ◎ ADR 기대효과
 - 이 같은 제도개혁 검토는 EU 탈퇴 후 영국에 부여된 자유를 기반으로 영국의 항공분야 신뢰도를 높이고, 평판을 쌓을 수 있는 분야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 것이며, 수천만 명의 승객들이 관련 항공사 혹은 공항에 보상을 구하는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게 될 것
 - 해당 계획의 주요 특징으로, 영국 국내선 운영 시, 휠체어 사용자 혹은 교통약자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혹은 고령자, 장애인 등을 위한 기동성 스쿠터가 망가지면 항공사가 전액 배상하는 방안의 의무화 여부에 관련 논의 등이 포함

[그림] 항공편 지연에 상황 예시



요약/시사점

- ▷ 효과적인 항공업계의 ADR 제도 도입과 지속적인 이행을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지침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규제당국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로 인해 이용승객들이 항공지연으로 인한 신속한 배상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출처 : 영국민간항공관리국, Government takes action to strengthen airline passengers rights, 2022.01.31

URL :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takes-action-to-strengthen-airline-passenger-rights>



국토교통기술 Brief



발행일 2022년 02월 25일

발행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주소 14066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문의처 031-389-6313